李대통령 인적개편 구상, 호남 인사 기용은

광주·전남 청와대 소통창구 마련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반환점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발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중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 민심의 소외감 확산 등으로 국민 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핵심 장·차관 지역인사 입각 몇명이나

정남준·박종구·이재훈·손인옥씨 물망

◇**청와대 개편**=일단 이미 사의를 표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후임으로 어떤 인물이 낙점될지도 관심사다.

당장 백용호 국세청장,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철현 주일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인적 개편의 폭은 중폭 이상, 시기는 조직 개편을 마치는 이번 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과감한 발탁 인사를 통한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 가운데 수석 비서관 1명, 비서관 1명 정도를 발탁해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인재풀의 한계 등을 거론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 개각**=정운찬 총리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7·28 재보궐 선거 이후로 관측됐던 이뤄질 개각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당장 개각을 7·28 재보궐 선거 이전에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선거 이후에 치르는 방향으로 여권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각 발표에서 인사 청문회까지 20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15일쯤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일단 정 총리가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는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 강현욱 전 전북지사, 임태희 노동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 출신 인사가 총리로 기용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부처 장관 진출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장관 가운데서는 교육, 문화, 보건복지, 국토, 환경, 여성 장관 등의 교체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장태평 농수산부장관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가 힘 있는 부처 장관에 발탁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거론되는 지역 인사**=일단 개각과 관련해서는 정남준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뛰어난 업무 능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정 전 차관의 기용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아주대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종구 전 교과부 차관의 이름과 함께 이재훈 전 지경부 차관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

또한,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과 최장현 국토부 차관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개편 키워드는 중도실용과 소통

이르면 이번 주내 단행…국정기획수석실 폐지 등 검토

청와대 조직개편이 이르면 이번 주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청와대 개편의 콘셉트는 집권 후반기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국정운영 기조인 중도실용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집권 후반기 체제로의 재편을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의 개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국정기획수석실을 폐지하는 방안과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방안,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마련돼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수석실의 기능을 조정할 경우 일부 정책 기능은 소관 수석실로 이관하고 국정관리수석실이나 국정관리상황실 등으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과학 분야가 교육과학문화수석실에 소속돼 교육 분야에 비해 다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작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과학비서관실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수석실 소관인 시민사회비서관실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독립시킬 경우 수석보다는 시민사회기획관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수석비서관 수를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만큼 공석중인 정책실장과 인사기획관을 임명할지 여부는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반환점을 앞두고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5일 청와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의 보직신고를 받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호남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나오나

7·14 전대 정두언 의원·김대식씨·이성헌 의원 도전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최초로 탄생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98년 부총재 경선에서 전북 출신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부총재로 선출된 적은 있지만, 최고위원제 도입 이후에 호남 인사가 최고위원에 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만 매번 한명씩 둬왔다.

하지만 이번 정당대회에서는 과거와 양상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유력한 호남 후보 3명이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출마한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0%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대에 출마한 호남 출신 후보는 친이(친이명박)계 재선 의원인 정두언 의원과 6·2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선거에 나섰던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의 이성헌 의원이다.

정두언 의원은 부모의 고향이 광주일뿐 아니라 유년기를 광주에서 보냈으며 지금도 친인척이 호남에 터를 잡고 있다. 지난 대선 때는 대표적 '호남 출신 이명박 측근'으로 스스로를 인정해온 터여서 '한나라당의 호남 민원 관문'으로 통했다.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영광 출신의 김대식 전 처장은 지난 전남지사 선거에서 두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며 주가를 올린데 이어 이번에는 당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전 처장은 생활 터전은 부산이어서 영남에서도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문제는 두 후보간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 따라서 두 후보 간 연대 여부가 주목된다.

이성헌 의원도 영광 출신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영광에서 살았고 지금도 이 의원의 양친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다. 친이계인 다른 두명의 후보에 비해 이 의원은 호남 친박계 지지자와 대의원의 집중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의 80% 이상이 친이계여서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영포회' 개입 논란으로 확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인 '영포회' 개입 의혹 논란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불법 사찰 사건을 '영포게이트'로 규정, '배후와 몸통'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특히 전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도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총리실의 자체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총리실의 조사내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문제가 된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영포회 정식회원이 아닌데도 야당이 이번 의혹을 '영포회와 연관 짓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역공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경악할만한 권력의 횡포로, 청와대까지 연관된 것으로 나오는데 몸통과 배후가 어딘지 밝힐 책무가 있다"며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영포회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확실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영포회에 대한 책임자로서 결자해지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영포회 해체하고 영포회와 관련한 불법민간사찰, 권력남용, 위·탈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게 특별지시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총리실이 자체조사를 펼쳐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검찰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상수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전대 주자들은 대부분 '철저한 조사와 문책'에 무게를 뒀다. 이성헌 의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히 조사해 만약 영포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승진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영포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명확히 처벌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